중소기업들 '무역 사기'에 운다

회사 이메일 해킹 수출입 대금 가로채

지난해 전남 2건 등 총 47건 41억 피해

'거래 은행이 바뀌었으니 부품 대금은 00은행 홍콩 계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암에 위치한 A 제조업체는 지난해 9월 평소 거래해온 중동 지역 거래처 명의의 대금 결제 이메일을 받고 별다른 의심 없이 52만달러(한화 5억5400만원 상당)를 송금했다. 자금 담당자는 이후 해당 거래처를 통해 송금 계좌가 중동에서 홍콩으로 바뀐 사실이 없는 점을 확인, 부랴부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즉시 홍콩 경찰과 연계, 계좌 동결 조치 등을 실시했지만 22만달러는 이미 빠져나간 상태였다.

회사 메일을 해킹, 수출입 대금을 다른 은행으로 빼돌려 가로채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를 입는 지역 중소기업들이 잇따르고 있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체로부터 신고된 '이메일 해킹 무역 사기'는 전남 2건 등 총 47건으로 피해 규모만 41억원에 달했다.

'이메일 해킹' 사기는 해킹으로 거래처 이메일정보(ID·PASS WORD)를 빼낸 뒤 해외 거래처인 것처럼 속여 계좌번호 변경·송금 등을 요청해 무역 대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전남을 비롯, 서울·부산(각 14건, 29.8%), 경기도(11건·23.4%) 등 국내 대도시 공단에 소재한 업체를 대상으로 범행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무역업체에 악성 코드가 숨겨진 메일을 보내 감염시켜 거래처 정보를 알아낸 뒤 거래 현황을 지켜보다가 입금 단계에서 해외 거래처를 사칭, 입금 계좌가 바뀌었다며 메일을 보내고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챙기는 수법을 쓰고 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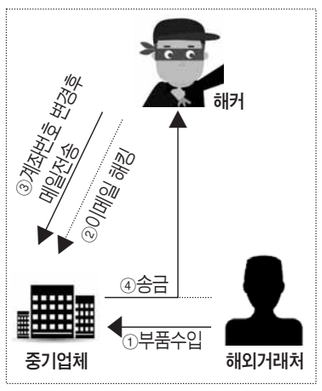
경찰은 사기범들이 메일 주소 중 알파벳 한 글자를 덧붙이거나 재정렬하는 방식으로 해당 업체의 해외 거래처 이메일과 유사한 메일주소를 만들어 접근, 업체 눈을 속이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이 조사중인 영암 피해 업체도 'W'로 시작하는 거래처 메일(Wool) 주소를 'VV'로 바꿔 보낸 사기범 메일(vvool)과 구별하지 못해 52만달러를 해외 '대포' 계좌로 송금하는 피해를 입었다.

해외 은행 계좌뿐 아니라 국내 은행 계좌(7건·14.9%)도 이용되면서 전남청의 경우 일산지역 업체가 무역 사기로 국내 은행에 송금한 27만달러의 계좌 소유자를 영암 지역 거주 외국인으로 보고 추적했으나 명의만 빌려준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무역 사기의 경우 해외 거래처들과 이메일로 소통하는 국제 상거래를 가장해 이뤄지는데다, 정상적으로 대금을 송금한 줄 알고 있다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 범인 대부분 해외에 있어 검거 및 피해 구제 절차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밖에 없다.

■이메일해킹 무역사기 수법



전남지방경찰청은 해외 거래처로부터 입금계좌 변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이메일을 받으면 반드시 전화나 팩스 등으로 확인할 것과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첨부파일은 열어보지 않는 게 무역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나주 교통사고 딸 잃은 엄마의 '트라우마'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지원 손길 어어져

경찰과 나주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교통사고로 딸을 잃은 뒤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40대 여성<광주일보 1월6일자 6면>에 대한 도움 의사를 피력했다.

법무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소속 광주스마일센터는 6일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딸을 잃은 어머니의 정신적 고통은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 범죄 피해자 및 가족 만큼이나 클 것"이라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논의해 교통 사고 피해 가족이 악몽을 딛고 심리적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신 상담 치료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을 담당한 나주경찰도 나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등과 함께 피해자 가족에 대한 정신적 상담 및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인다는 계획이다.

나주 경찰 관계자는 "사고의 충격 뿐 아니라 또 다른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피해 가족들의 아픔이 하루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순천시 법인카드로 민간단체 밥값 계산

선관위, 선거법위반 조사

순천시장이 생태해설사협의회 회원 모임에 참석해 격려하고 자리를 뜬 뒤 식대와 술값 등 모든 경비를 순천시가 부담한 사실이 드러나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6일 순천시와 순천시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7일 순천만운영과 소속 공무원들이 순천시 덕월동의 한 식당에서 생태해설사협의회 회원 40여명이 모인 자리에 참석해 순천시 업무용 법인카드로 밥값 78만5000원을 계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은 2차 술자리 비용 마련을 위해 식대를 부풀려 100만원으로 결제한 뒤 차액 20여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이 단체에 건네기도 했다.

이에 앞서 생태해설사협의회는 순천만생태공원 생태교실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정기총회를 열었으며 조충훈 순천시장이 잠시 들러 이들을 격려하고 자리를 떴다.

이에 대해 순천시 측은 이날 행사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업무추진비로 지원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해당 행사가 업무추진비로 지원할 수 있는 성격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청소년 야간노동 업체 단속" 전교조 광주지부·참교육학부모회 등 16개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6일 광주YMCA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야간에 청소년들을 고용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 강화를 촉구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3천만원 짜리 리니지 '집행자의 검' 훔쳐

광주서부경찰, 20대 영장

"3000 만원 짜리 '집행자의 검<사진>' 맞나요?"

김모(23·강원도 태백시)씨는 지난해 12월, 온라인 게임 '리니지' 글루디오 서버에서 고(高)레벨 사용자 A(38·광주시 서구)씨에게 사이버상에서 대화를 신청했다.

김씨는 "13년간 게임을 해도 레벨이 올라가질 않는다. 캐릭터를 키워달라"며 대화를 걸었고 A씨 보유 게임 캐릭터와 장비를 칭찬하며 환심을 샀다. A씨는 김씨가 함께 게임을 하며 자신을 추켜세우더니 "광주로 내려갈 테니 밥 한끼 먹자"고 해 흔쾌히 받아들였다.

둘은 지난해 12월19일 광주에서 만났고 이야기를 나누다 A씨의 광천동 집으로 향했다.

A씨는 "고 레벨 캐릭터로 게임을 해보고 싶다"는 김씨에게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알려주는 선심을 썼다. 비밀번호를 알려주더라도 게임에 접속하려면 휴대전화 인증번호가 있어야 하는 만큼 휴대전화만 잘 단속하면 된다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김씨는 이 날 새벽, A씨가 자는 틈을 타 곁에 있던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뒤 A씨의 계정에 접속, 3000만원에 거래되는 집행자의 검, 마법망토와 부츠 등 3500만원 상당의 장비를 모두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집행자의 검'은 워낙 희귀한데다, 수요도 많아 3000만원을 호가할 정도다.

광주서부경찰은 6일 충남 천안의 한 PC방에서 김씨를 붙잡아 훔친 휴대전화로 타인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한 뒤 아이템을 빼돌린 혐의(절도 및 정보통신망침해)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분신 사망 관련 '우량농지' 유권해석 받기로

순천시가 지난해 12월 20일 발생한 민원인 서모(43)씨의 분신 사망사건과 관련해 해당 농지가 '우량농지'인지 여부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로 했다.

6일 순천시에 따르면 민원인 분신사망 사건 발생 이후 '민원처리 합동 진상조사위원회'를 2차례 열었지만 농지전용 불허 기준이 된 '우량농지'에 대한 시 측과 유족 측의 이견을 보이고 있다.

순천시는 숨진 서씨가 제출한 주유소 건축허가 심사 과정에서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해당 농지가 '우량농지'로서 보전 가치가 있다"며 농지전용을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족 측은 2008년 전남도의 행정심판에서 해당 토지를 우량농지로 인정하지 않은 채 '연접지 개발제한'을 근거로 기각한 사실을 들어 일반농지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 측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미 해당 농지가 우량농지로 확정됐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순천시는 조만간 관련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법제처에 '해당 농지가 농지법상 우량농지인지 여부'를 묻는 유권해석을 묻기로 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한빛원전서 근로자 2명 작업 중 숨져

한빛(영광) 원전 정비 작업을 벌이던 노동자 2명이 숨졌다. 부품 비리에 잦은 고장 등으로 원전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상황에서 안전 사고까지 발생해 안전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거세다.

6일 오전 10시10분께 영광군 홍농읍 한빛 원전 5호기의 계획예방 정비 작업에 투입됐던 협력업체 직원 김모(55)씨와 문모(35)씨가 숨졌다.

김씨 등은 이날 원전 내 '방수로(배수로)' 청소·점검 작업을 끝내고 바닷물 유입을 막는 방수로 '게이트(gate)'를 크레인에 연결, 들어올리는 작업을 벌이던 중에 사고를 당했다.

김씨가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방수로 내에서 게이트를 크레인과 연결하는 작업을 하다 연락이 두절되자 다른 근로자 1명과 밖에서 대기하던 문씨가 방수로에 뛰어들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경찰과 한빛원전 측은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사고 이후 1시간여가 지난 뒤 소방대원들에 의해 인양됐다.

경찰은 사고 현장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에 나서는 한편, 현장 총괄 관리를 맡고 있는 한빛원전 및 정비 작업을 담당한 협력업체 측을 상대로 작업 중 안전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중이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운좋은 복면강도? … 편의점 점원 잠들어 '조용히' 돈 훔쳐

쌍나팔

○…복면까지 하고 편의점에 침입해 금품을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이 잠을 자는 종업원을 위협하지 않은 점이 참작돼 강도 혐의가 아닌, 절도 혐의로만 입건.

○…6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박모(20)씨는 지난달 13일 새벽 3시35분께 서구 화정동 C편의점에서 여종업원 A(17)양이 잠을 자는 틈을 타 금고에 있던 현금 42만 원을 몰래 가져갔다는 것.

○…복면을 하고 침입한 박씨가 범행을 저지르는 사이 A양은 잠에서 깼으나 잠에서 덜 깬 듯 돈을 훔쳐 달아나는 박씨를 바라만 봤는데, 경찰은 박씨를 붙잡아 흉기 소지 여부 등을 추궁했으나 부인해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